

먹잘것 별로 없는 사회적 대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3면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정치

4면

학교 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 정부 대책의
미흡함 보여 주다

12면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5면

연일 최강 한파와
기후 변화

6~7면

정의당

파리바게뜨와
정의당의 성격 9면

김종대 의원의
UAE 게이트 폭로 9면

여성과 성소수자

장자연 사건과
여성차별 7면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10면

경제 정책

서울 아파트 값
상승 10~11면

비트코인
거래실명제 6~7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김승주

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환자부터 요양병원 침상에 태권도 띠 등으로 결박돼 있었거나 혼자 힘으로 이동하기 힘들었던 고령의 환자까지, 안타까움에 말문이 막힌다.

병원인데도, 충격적일 정도로 건물 자체가 안전에 취약했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 확보 상태가 엉망이었고, 규정을 어긴 과밀 병실이 많았다.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에는 유독 가스를 막아 줄 방화문이 없었다. 또, 제천 화재 건물처럼 대피가 어려운 필로티 구조[1]였다.

특히 스프링클러(자동으로 물 뿌리는 장치)와 옥내 소화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값싼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물 외장재(드라이비트 공법)는 급속도로 타면서 유독 가스를 내뿜었고, 사

Q 용어설명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을 벽 없이 기둥만 세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으로의 대피로 확보가 어렵다. 지진에도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이 구조를 선호한다.



불법 증축, 과밀 병실, 스프링클러 미설치 ... 공공 병원이 아니면 더 큰 이윤 추구 압박을 받는다

망자 전원이 질식사했다.

2014년 장성에서도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건물 규모가 기준보다 작은 병원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밀양 세종병원이 그런 병원이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보여 주듯,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 당시 200여 명이 입원해 있던 5층 짜리의 작지 않은 병원이었다.

이는 단지 행정적 허술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중소 병원들은 많은 노동계급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렇지만 안전 투자의 우선순위는 까맣게 잊혀지기 일쑤다.(일부 중소 병원들은 심한 적자에 허덕이지만 병원은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폐허처럼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수익률이 높은 병원이라고 해서 알아서 안전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병원장들은 적자가 많은 병원들을 사고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도 병원에 대한 책임을 덜 지려고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병원의 영리화를 갈수록 허용해 왔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이런 병원들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6퍼센트밖에 안 된다.

정부가 나서라

병원의 영리화·민영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다. 홍준표는 2013년 경남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멸종이 있던 공공병원마저 없앴다.

따라서 홍준표가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책임 운운하는 것은 여당을 공격

하기 위한 역겨운 위선일 뿐이다(제천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참사에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전 대진단'은 이미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실시해 온 것이다.

반면 2018년 공무원 총원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방 인력보다 경찰 인력 충원을 우선했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견줘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도 멈출 생각이 없다. 여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일부 내용과 형식만 바꿔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밀양 화재 유가족을 말로 위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병원에 대한 공공 투자와 안전 인력·훈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기업주·건물주·병원재단의 이윤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각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참사를 끝내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할 것이다. 노동계급은 대형 참사의 큰 피해자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

1월 29일 온라인 기사에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안우준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배연창은 잠겨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는 닫힌 채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다. 건물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다. 방화 구획도 매우 불량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실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건물주는 돈벌이를 우선해 생명과 안전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화재 현장 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응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충북도 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를 압수수색하며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참사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 성격이 짙다. 물론 현장 상황 판단이 늦고 서툴렀던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더 컸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소방

관리,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소방 관련 규정 등. 이런 구조적 문제의 이면에는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 공무원 처벌을 반대하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은 10여 일만에 4만 명이 참여했다. 화재 현장을 취재한 일부 지역 언론 기자들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소방관들

을 펜과 혀로 죽여 희생양으로 삼은 문화(文火) 대참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따진다. 하지만 화재 원인을 진지하게 규명하거나 재발 방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삭감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해 온 주된 책임자다. 그들은 소방 인력 확충 예산에도 반대했다.

그들에게 이 참사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등은 화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왜 소방관 증원에 반대하냐” “지난 9년(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재난 대비를 위해 무얼 했느냐”는 항의만 받았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 강현삼이 일찌감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 왔다.

건물 구입 과정에서 경매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강현삼의 처남인 건물주는 경매 개시 당시보다 25억 5천만 원 싸게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건물 구입비의 95퍼센트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도 도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강현삼은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이 지위를 이용해 소방 안전 점검 지적 사항을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려 하진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위선적이게도 '제천 화재 참사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이런 비리들의 진상부터 철저히 조사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도 소방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천 화재참사가 있는 지 한 달여만에 밀양에서 또다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도돌이표처럼 대형 참사가 되풀이된다. 대형 참사를 미흡한 현장 대응 문제로만 협소하게 볼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부패와 비리를 낳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이 비열한 우선순위에 도전해야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1.25)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가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가의 걸음을 땀 것이다.

대화에 적극적인 김명환 신임 지도부가 취임하자,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연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직 직접 나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햇볕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을 논의하자니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의 제안을 “열린 자세”라고 평가하며 이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장 담화문).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은 후보 시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신8자회의’를 제안하면서 “[여기에] 노사정위원장이 들어가는 순간 식물화하고 있는 노사정위에 영양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었다(〈매일노동뉴스〉 2017. 11. 20).

무엇보다, 김명환 신임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추진은 이전



노동계급이 양보를 얻는 게 아니라 양보를 강요당할 것이다

정부들의 대화제외와는 다르다고 보는 듯하다. 이전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하고자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국정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노동조합 지도자들과의 대화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여 성취하려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람을 일으켜 옷을 벗기느냐 햇볕을 쬐어 그렇게 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왔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모델로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사례다.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여성·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며 임금 양보를 수용했다.

광주형 일자리

올초부터 다시 부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한 가지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는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되,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차·기아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은 중앙 단위뿐 아니라 산업·지역 타협도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정부 안팎의 온건 개혁파 인사들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로 특히 연대임금을 꼽는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사정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조성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상충부를 자제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정부에서 1차 노동시장을 약하게 하면 양극화가 극복될

것 같다고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인 연대임금전략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사실, 노·사·정 대표자들이 “인식을 같이하였다”(민주노총의 브리핑)는 사회적 대화 의제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의 위기 장기화와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제들을 놓고 노동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위기 때는 국가 경제와 기업 생존을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입증

물론 김명환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 직접선거를 통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내용을 합의할지에 대한 지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도리어 양보가 강요된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면, 기존 노

사정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좌파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춰 내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협상하는지도 감시해 들춰 내야 한다.

우리는 김명환 신임 지도부가 대화뿐 아니라 투쟁도 공약했음을 기억한다. 김명환 위원장 자신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기도하고, 최저임금 무력화를 방조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제로’ 향의를 무시하는 상황을 보면, 그에 걸맞은 투쟁이 조직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만약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기성 정치구조나 대화·교섭을 위한 압력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화에 발목이 잡혀 투쟁 적기를 놓치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좌파들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대화 기구에 들어가고 투쟁을 뒷전으로 한다고 해서 기층에서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좌파가 그런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할 때 노동자들이 대안 부재 때문에 나쁜 안을 수용하고 수동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다수가 사회적 대화 참가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노동자들을 경멸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를 구체적으로 폭로·비판하는 한편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 투쟁을 지지하고 촉진하려 애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본질과 한계를 대중에게 입증해야 한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8

7월 19일(목)~22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해외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의 트랜스 여성으로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다. 대학 강사 출신으로(현 67세) 대학노조와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2015년까지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는데, 영국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였다. 또, 대학노조 내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로 이뤄진 ‘UCU좌파’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맑시즘2018에서 연설할 주제

-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십 개 알짜 주제로 맑시즘2018에서 발제합니다.

※ 발제자와 주제가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 업데이트됩니다.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김영익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물리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대표팀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막아 버렸다.

러시아 정부는 조직적으로 러시아 선수의 도핑에 개입했던 듯하다. 올림픽 성적이 국가 위상 과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은 푸틴 정부가 소련 붕괴 이후 '위대한 러시아'가 부활했음을 과시한 기회였다.

물론 도핑 문제는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계에 만연한 일이다. 예컨대 2015년에 유출된 국제육상연맹



평창올림픽도 역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정치적 경쟁의 장일 것이다

(IAAF) 보고서는 육상선수 800여 명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비정상적이었으며, 이 선수들이 2001~2012년 올림픽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리만 문제냐 하고 반발하는 까닭이다.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금지 문제는

러시아와 서방(특히 미국)의 점증하는 갈등과 얽혀 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공공연히 경쟁자로 지목한다. 나토와 러시아는 유럽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를 막는 과감한 조치를 내린 데는 서방 지배자들의 러시아 히스테리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신냉전이 절정으로 치닫자, 그 영향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각각 서구과 동구 진영 나라들이 불참한 반쪽 올림픽이 된 바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악화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 같다.

평양 올림픽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홍보한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며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해빙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수단 외에도 고위급 대표단, 예술단, 응원단 등이 내려온다. 논란이 있었지만,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도 구성된다. 최근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올림픽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밴쿠버 회의)는 한국의 제안으로 공동의장 성명에 남북 대화 지지를 밝혔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살리려고 신경 쓴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익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시도가 매우 못마땅하다. 홍준표 등은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됐다고 성화다.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죄는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 진전이 국제 대북 압박 공조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깨질 평화이고 약속들이라면 빨리 깨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저주와 악담은 우익 야당 정치인들 입에서 연일 쏟아진다.

우익들이 ‘평양 올림픽’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억지다. 남북 스포츠 교류는 오랫동안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여러 번 실시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 하에서 1991년 탁구와 청소년 축구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열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은 물론, 북한 권부의 실세인 최룡해까지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온 바 있다.

국제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인민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 준다. “제재로 대외무역이 대폭 축소되고, ‘부족의 경제’와 ‘결핍의 경제’가 강화되면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은 악화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재’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제재는 인도주의와 충돌한다.”*

특히, 대북 제재는 대북 군사 압박 강화와 결합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공공연히 대북 예방 공격과 선제 타격을 거론하는 가운데, 우익들이 국제 대북 압박 공조를 중시하자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쇠를 지고 불로 들어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특수부대와 항공모함

진정한 문제는 지금의 남북 화해·협력 시도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미흡하다는 데 있다. 한반도 주변의 제국주의 갈등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리라 기대하기가 안타깝게도 힘들다.

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않지만, 이는 연기된 것일 뿐이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는 훈련이 재개될 것이다. 일각에서 ‘평창 이후 전쟁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이 현 남북 대화를 마뜩잖게 여긴다는 점은 군사 행동으로도 드러난다. 올림픽 개막 즈음에 미국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추가 배치될



올림픽에 항공모함도 ‘출전’시킨다는 트럼프

것이다.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소위 ‘참수작전’)이 가능한 미군 특수부대도 한국에 들어와 전쟁 대비 훈련을 한다. 남북 단일팀과 미군 참수부대가 한국에 함께 있고, 미군 항공모함 추가 배치와 북한 건군절 열병식이 나란히 벌어지는 형국이다.

그리고 사실, 앞서 언급한 ‘밴쿠버 회의’가 남북 대화 지지만 밝힌 게 아니다. 미국 주도의 공동 의장성명은 기존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사실 전체적으로 밴쿠버 회의의 성명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워낙 강화돼 있어, 스키 선수들을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보내려 비행기를 띄우려 해도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도 지금의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돼 있음을, 따라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 진전된 게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문재인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동,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제재 조치 해제 등을 모두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까닭이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여길 것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창이 “북한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1월 31일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맹비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설사 향후 북·미 공식 대화가 열려도 그 앞길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격언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 사이의 간극이 워낙 커서, 협상과 합의, 합의 이행 과정에서 온갖 걸림돌이 수시로 튀어나올 것이다. 냉전 해체 이후 30년 가까이 우리는 북·미 대화가 파탄나고 다시 긴장이 치솟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다.

따라서 평창의 평화는 **항구적** 평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인의 줄타기식 대처는 이 상황을 근본에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오직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투쟁을 창출해서 건설(확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이다.

*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김연철, 창비, 2018

한반도 주변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강대국들

남북 대화로 진정한 해빙 국면이 열리기 어려운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관계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서 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경쟁이 가장 격심한 곳이고, 앞으로 이 경쟁은 장기적으로 더 악화할 것 같다. 한반도는 이 경쟁에 깊숙이 얽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갈등 속에 어느 한쪽에 급격히 쏠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노력은 일관되지 못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를 천명하는 것을 꺼림에도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아태지역 국방외교 간 가능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1월 22일 “미친 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는 이제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 테러리즘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이 약탈적 경제력을 사용해 이웃 국가를 협박한다고 비난했다.

미친 개

매티스의 선언은 제국주의의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이 더한층 악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31일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이는 핵군비 경쟁까지 수반한다.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더 커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해 나아간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한반도에서 위기를 급격히 증폭시킬 가능성도 커진다. 얼마 전 하와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경보가 잘못 울린 사건은 앞으로 더 위험한 형태로 전개될지 모른다.

또한 미국 권력층 내에서 패권을 위해 대북 무력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가 임박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김문성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항변했다.

김백준 등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구속되는 반면, 내부자 구실을 한 옛 심복 김희중에게는 구속영장 청구조차 되지 않는 걸 보고 위협감을 느낀 듯하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검찰의 적폐 수사를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작자다. 부패한 파렴치범 주제에 보복 운운이라니?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난 뒤에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처럼 정치적 반대파를 야비하게 보복한 정권이 또 있었던가?

우파 야당들은 (진작부터) “정치 보복에 눈먼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비난해 왔다.

구속 상태로 받은 1월 29일 재판에서 박근혜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조차 “정치 보복” 수사·재판이라고 강변했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프레임 설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며, 우파를 결집하고, 추한 비리 혐의



이 야비하고 뻔뻔한 자를 구속하라

를 몰타기하며, 시간을 벌려는 책략일 뿐이다.

이런 저질 프레임 전쟁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히게 하려고 우파는 집권 9년 동안 언론 장악에 그토록 힘을 들였을 것이다.

계급적 정의

그러나 이미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부터 청산돼야 할 적폐로 촛불 대중에 의해 지목된 것들은 이명박근혜 통치의 알맹이였다.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인 것들이 적폐 청산의 핵심 목록 속에 있었다.

성과연봉제 등 노동조건 후퇴 정책과 이를 위한 노조 탄압,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진상 규명 방해와 모욕·탄압, 친일 부역과 독재·초차취

를 찬양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와 전공노 탄압, 청와대-국정원이 중심이 되고 검찰과 법원이 협조해 벌인 전방위적 정권 비판 입막음 공작들(노동·좌파·언론 등에 대한), 국가 경영을 빙자한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의 부정 축재, 미·일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위해 피해자와 주민들을 내쳐 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등, 그밖에도 쌍용차 투쟁 폭력 진압, 용산 살인 진압, 강정과 밀양에서의 폭력, 4대강 비리,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등등.

이 문제들은 권력자들이 친자본주의·친제국주의 기득권 세력인 자신들을 위해 평범한 민중에게 횡포를 부린 사례였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정치·안보 위기에 직면해 노동

자·민중을 잔인하고 야비하게 억누른 문제들이다.

따라서 애초에 적폐 청산은 피억압 계급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그들의 요구였다. 우파 정권이 벌인 가혹한 통치의 적폐들을 바로잡고 그 범죄자들을 응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수사가 보복성이나 아니냐가 아니다. 오히려 구 여권의 계급적 야만성과 가혹함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응징·복수 의지가 충분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폐기 말고는 촛불이 앞 순위로 꼽은 적폐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문재인은 해경 조직을 부활시켜 주면서, 세월호 참사 발생과 은폐에 기여한 자들을 다시 중용해 줬다.(그 결과 유골 은폐가 벌어졌다.) 이런 해수부와 해경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다더니,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한다. 상징적으로 원세훈과 김기춘 등은 구속됐지만(출발로는 좋다), 아예 조직을 해체하고 파면시켜야 할 기무사와 사이버사, 국정원과 그 곳곳에서 보안경찰 노릇을 하던 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통치자로서 문재인은 촛불의 눈치도 보지만, 지배계급 전체가 적폐 수사의 확대와 지속을 더는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를 두고 국민적 단결(사실은 지배계급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그는 고려한다.

최초의 ‘민주’ 정부를 자임한 김대중은 당선 직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학

살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 줬다. 김대중은 우파 언론도 공격하는 듯하다가 멈추고 타협했다. 이런 패턴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반복됐다. 이는 우파의 기만 살려 줬을 뿐이다. 전두환은 지금도 1980년 광주 학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등 고약한 헛소리를 지껄인다.

사실 1987년 이후 연이어 등장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모두 과거 청산을 외쳤지만, 독재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려 했다.(노태우는 본인이 학살자다.) 두 정부 모두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고서 야비로소 전두환을 백담사에 보내고(노태우 정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해 실형을 선고해 줬다.(김영삼 정부)

‘민주’ 정부를 자처한 자들이 군사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고 결국 사면해 준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파의 사기를 높여 주고, 재집권한 뒤 우파가 정치 보복을 할 수 있게 해 준 주요인의 하나다.(더 중요한 다른 주요인은 군사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다른 사회집단들을 천대하고 억압했다는 것이다.)

대중의 바람대로 우파 정권의 만행들을 살살이 들춰내고 강력하게 응징할수록 그들이 설사 다시 집권하더라도 쉽게 반동적 행태를 다시 벌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파 야당들이 헛소리들을 해대며 적폐 청산에 저항하는 행태도 어정쩡한 과거 청산 경험에서 배운 것이다.

따라서 고통받으며 멸시당해 온 노동계급 운동과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적폐 청산과 복수와 응징은 한 몸이다. 진짜 쟁점은 “적폐 청산 vs. 정치 보복”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김문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최근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 위신에 타격을 입은 국정원 대신 국가보안법 수사를 주로 해왔던 경찰에 대공수사를 넘긴다고 해서 대공 수사에 수반하는 억압적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나 그것과 같은 성격인 형법상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 죄

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까지 묶어매려고 국가기관 내에서도 뇌물을 뿌리고 국세청까지 동원하던 권력이 명목상의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경찰도 억압적 대공수사의 전문 집단이고 폭력적인 수사 권력의 양대 기둥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해방 정국에 한반도를 강점한 미군정 내 경무국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은 정도로 우익적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 것도 해방 정국과 이승만 정권 하에서 경찰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경찰은 자신들이 잡거나 죽인 “빨갱이”를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거나, 과잉 진압으로 경찰을 처벌했던 한 검사를 여·순 사건 와중에 총살할 정도로 무도하고 힘이 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넘어갈(시설) 경찰청 안보수사처는 지금의 경찰청 보안국과(그 산하인) 보안수사대를 확

대·강화하는 기구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2012년부터 5년간 검거한 378명 중 간첩 10명을 뺀 나머지가 거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임이 확인됐다. 박종철 열사를 죽게 한 것도(당시 안전기획부의 지휘를 받던) 보안수사대 경찰들이었다.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는 박종철 열사 등을 고문했던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조사 시설(지금 명칭은 보안분실)을 전국에 43곳이나 운영 중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은폐된 별도 시설에서는(고문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강압적 수사가 가능하다.

과거의 보안경찰 DNA는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기구를 안보수사처로 확대하면서 경찰은 국정원의 현직 대공수사 요원들을 경력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이미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런 식의 경력직 채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의 국가정보기관의 실태와 보안

경찰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국가의 억압적 기능인 국내 사찰과 공작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혁명적 좌파를 범죄자로 몰 수 있는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지 않는 마당에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으로는 그 억압적 성격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지배계급 내 권력 균형 재편으로, 더 효율적인 체제 수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군사독재 이래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부패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정원과 검찰 등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대중의 증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신뢰 만회를 위한 모종의 제스처(외양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경찰이 대중의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집회나 저항에 대한 온갖 국가폭력의 주범이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 드러낸
현직 검사의 폭로

★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 현대·기아차 이종임금제 확대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생령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 건설 노동자 독자 편지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장비 부실

정호중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권이 열여섯 시 저치를 마련해야 하는 불면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환경 위기다.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열을 가둬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 이 '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자들은 최근 벌어지는 수많은 기상이변들이 대부분 기후변화의 직접적 결과라고 지적한다. 산업화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섭씨 1도가량 상승했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수많은 폭우와 홍수, 가뭄을 일으키고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급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6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결과는 파국일 것이다.

내일 온실가스 배출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은 기온이 오를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거대한 빙하 습지가 녹고 있다. 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엔은 2015년 파리 협약에 따라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최소한 급세기 중반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파리 협약은 매우 미미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 협약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하나인 미국은 아예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2000년대 들어 배출량에서 미국을 따라잡은 중국은 지금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더 격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응수단을 발전시켜야 할 듯하다. 안전한 주거, 값싸고 효율적인 방난방 시스템, 공공 보건서비스 확대 등.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파국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온난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러려면 훨씬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 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구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기, 교통, 주거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개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나 소소한 개혁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아무리 무의미한 상품이라도 경쟁에 의해 생산된다. 이 경쟁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개별 자본가들의 이윤과 자본 축적을 위해 이뤄진다. 따라서 인류와 자연에 끼치는 장기적 결과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장기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엄청난 과잉 생산과 낭비를 낳는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일찍 마모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된다. 소매

업체는 배송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 대신 더 많은 포장재를 사용한다.

주책 난방 에너지는 대부분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린다. 건물주들이 단열시설을 보강하도록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모순이 있다.

노동자들은 도심의 사무실이나 산업단지나 공공기관에서 함께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경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다. 노동자들이 통근을 위해 매년 수백 시간의 무급 노동을 하고 쇼핑과 요리, 청소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에 화석 연료가 사용된다.

석유와 가스 공급에 대한 통제력은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일뿐 아니라, 국제적 협상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기업들과 그들의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 중동이 상시적 혼돈에 빠져 있는 이유다.

근본 생태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산업화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기술과 산업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이제 기존 에너지

화석 연료에 종속된 자본주의가 이번 한파의 배후에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한다

않고 식량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광범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항공 산업의 부분별한 팽창은 중단돼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휴가를 보장하면 휴일을 버려치기로 날아다녀야 하는 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 투쟁과 교차한다.

대중교통을 개선하면 도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이 직장 근처에서 편차를 주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더욱 줄일 수 있다.

공공 식당을 만들면 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인 분배와 유통을 개선할 수 있다. 쓰레기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살충제, 비료 및 기계류를 사용하지

하고 계획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과 각국 정부는 각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조직한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를 고려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하지만 착취에 기반을 둔 체제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회, 즉 인간의 필요에 기반한 사회주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심지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계획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사회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생산을 조정

검찰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검토 권력층의 추문 감추기에 급급했던 권력기관들

김은영

최근 검찰 개혁위원회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검토 대상에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면서 9년 전의 이 사건이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JTBC <뉴스룸>도 이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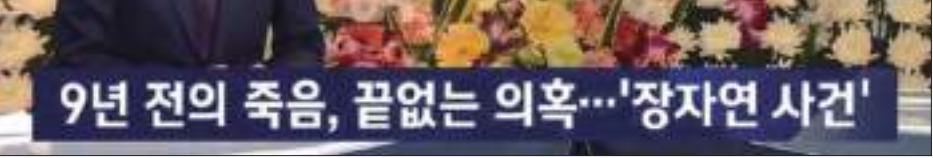
2009년 3월 당시 신인 연기자였던 장자연 씨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겨 유력 인사들에게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해 왔음을 폭로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한 언론계, PD, 금융계 등 권력층 인사 수십 명이 '장자연 리스트'에 나왔다.

장자연 씨는 육식과 참실이 갖춰져 있는 전 소속사 빌딩 3층에서 수없이 접대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어머니 기일에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집대 자리에 불려나가 차 안에서 서럽게 울어야 했고, 한 영화 감독의 술과 골프 접대 요구를 거부하자 차를 압수당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런 계획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하지만 착취에 기반을 둔 체제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해 사회 전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국가는 하룻밤 사이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윤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9년 전의 죽음, 끝없는 의혹... '장자연 사건'

체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성차별과 부정부패

장자연 씨의 자살은 사회 핵심부에 자리 잡은 추악한 성차별과 부정부패를 드러냈다. 특히, 연예 산업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착취받고 억압당하는지를 보여 줬다.

그동안 많은 여성·노동단체들과 개인들이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정부도 보통 사람들을 보호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선순위가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안정화에 있기 때문이다.

부기로 얼룩진 '나쁜 자본주의'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좋은 자본주의'의 차이는 부차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볼 서민들에 대한 보호책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잇단 성추문으로 현직 국방장관과 부총리 등이 연이어 사퇴한 가운데 프레지던트 클럽 자선파티에서 이뤄진 성추행과 괴롭힘 사건이 폭로됐다. 영국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내몬 추악한 사건에 권력층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검찰, <조선일보> 등 권력기관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은폐

당시 경찰청장 강희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조선일보> 고위간부가 리스트에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조선일보>는 본사 사장이 연루된 장자연 유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비롯한 언론과 기자들,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모두 패소했다.)

검찰은 술집대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많은 정황 자료와 장자연 씨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서도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차량 두 대 분량이라고 한다.) 권력층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고, 고작 기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했다. 온갖 육식과 폭행을 일삼으며 장자연 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기획사 대표는 결국 폭행죄만 적용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는 데 그쳤다.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김중헌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류됐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독단으로 입장을 발표한 일부 각료들 탓에 정부 입장이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책을 가했다.

요컨대, 현재 정부 정책의 흐름은 대

체로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규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비록 거래소 폐지가 여전히 "살아 있는 옵션"이라는 말이 있지만 말이다.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효과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정 효과를 내는 듯하다. 실명제 시행 첫날인 1월 30일 실제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시세가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과거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강화됐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했다가도 다시 거품이 켜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실명제 시행 정도로 압

호화폐 일반에 대한 투기가 사라지는 양을 것이다.

그레도 지난달에는 50퍼센트에 육박했던 '김치 프리미엄'(암호화폐의 한국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현상)과 그 차이를 말하는 언어이 현재 6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유독 과열된 한국 시장을 식히는 효과는 있는 듯하다.

비트코인 투기 열풍은 당장 식히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준으로 심각했을까?

아드리안 리, 홍기형 등 재무학자들은 비트코인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당장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큰 충격이 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거품 규모도 충분히 크지 않거

니와, 비트코인 시세의 하락이 다른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반응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물론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다수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위협할 수 있다고는 한다.

그레도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에 더욱 심하게 과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의 투기 광풍이 정권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불안정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금융법 금융위는 비트코인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당장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큰 충격을 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거품 규모도 충분히 크지 않거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의 초점은 암호화폐 거품이 한국 자본주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암호화폐 탓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보통 사람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현행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취급된다. 그래서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갖출 의무가 전혀 없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의 30퍼센트 이상이 방화벽 조치 사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에만도 국직화 사건이 여럿 있었다.

예컨대 국내 1위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가 일어났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5억 원과 17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해킹당해 파산한 유빗 사례도 있다. 최근 일본 최대의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피해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방화벽의 지도 하에 이들 업체에 대한 보안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금융업보다는 훨씬 불충분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 판매업자이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킹이나 거

품 붕괴로 피해를 입은 보통 사람들은 구제받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자는 무려 300만 명이다. 최근 발표된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자의 오직 4퍼센트가 약 97퍼센트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거래소들도 투기 열풍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최근 벅스는 거래소 코빗을 인수해서 화제가 됐다)

요컨대, 해킹이나 거품 붕괴 등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법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는 취약한 반면, 암호화폐 투기 열풍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자산 소유자들은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이다. 정부도 보통 사람들을 보호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선순위가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안정화에 있기 때문이다.

투기로 얼룩진 '나쁜 자본주의'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좋은 자본주의'의 차이는 부차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볼 서민들에 대한 보호책이다. 좌파는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 8면으로 이어짐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김지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삼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국정원은 그 자체로 적폐다. 국정원이 선거개입, 세월호 여론조작 시도, 비리자금 전달 등 이명박근혜의 부패·비리의 큰 일부였음이 훤히 드러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국정원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여기에는 태생부터 독재 정권을 비호하며 공작정치를 일삼고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을 공격하고 때때로 개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국정원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도 당연히 한몫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우익은 문재인 정부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간첩수사 공백 운운하며 말이다. 국정원이 저지른 술한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뻔뻔하게 국정원에 손도 대지 말라는 듯 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은 이미 ‘보안사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 기능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수행해 온 기능과 임무는 살려두되, 간판만 바뀌 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최근 문재인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뒀다. 국정원을 비판해 온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안을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본연의 기능

한편,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도 이 체제를 수



떠들썩한 개혁 이야기, 보잘것없는 알맹이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사회에서 폭압 기구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호하는 지배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를 수호하고, 지배자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과 운동을 감시·탄압하는 구실은 자본주의 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은 상호 의존적 관계다. 국가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률을 만들고 집행한다. 노동계급의 저항으로부터 자본을 보호하는 일도 한다. 그래서 체제에 도전하거나 정부 비판적 언행으로 저항을 북돋거나 조직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적 업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 억압기구다. 예컨대 보안경찰은 심리전(흑색선전도 여기에 포함된다)과 비밀공작 등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다. 보안경찰의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 대중의 민주적 권리와 충돌한다.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운영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

당도 ‘정보기관’이 해 온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한다. 당장에 문재인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나 사드 배치 저지 운동에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결코 나아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간첩’ 사건과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이 벌어졌다.

그래서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안경찰은 자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위해 일하거나 국내 저항 세력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벌여 왔다. 조작과 공작은 이런 일을 위한 흔한 수단이 된다.

조작과 감시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는 음모와 공작으로 악명 높다. CIA 핵심 간부였던 리처드 비셀은 1968년 미국 외교위원회에서 CIA 비밀활동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친미 인사에 자금 지원, 친미

조직과 친미 노조 등 지원, 비밀 선전, 경제 교란 등의 작전, 정권 전복 내지 방어 위한 준군사 행동 등.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1979년 친미 독재 소모사 정권이 무너지고 산디니스타 정부가 집권하자 CIA는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 우익인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법까지 만들어 가며 정권 전복을 위한 콘트라 지원을 금지했지만 CIA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한 CIA는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리려 심리전을 벌였고, 쿠바 카스트로 제거 작전,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 세기가 바뀌고도 CIA가 이라크에서 포로를 학대했다는 의혹과 세계 곳곳에 불법 구금 시설을 운영 중이라는 정황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CIA 활동은 국외로 한정되지 않았다. 1947년 국가안보법은 CIA의 국내 문제 개입을 금했지만, CIA의 실제 활동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1970년대

CIA가 민간인 1만 명을 사찰해 왔음이 폭로됐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사찰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했을 뿐 아니라 활동가들에 대한 온갖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CIA가 연루됐다.

CIA의 국내 활동에 대한 비난이 들끓은 후에는? 연방수사국 FBI가 이런 일을 이어 갔다. FBI는 1953년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에 핵폭탄 정보를 넘겼다는 ‘핵폭탄 간첩’ 혐의를 씌웠다. 매카시즘 마녀사냥꾼들은 제대로 된 증거를 대지 못했지만 법원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런 행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안보국 NSA와 FBI가 손잡고 국내외에서 광범한 감시와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다. 경쟁하는 다른 국가의 리더들, 예컨대 독일의 메르켈도 감시 대상이었다. 2006년 부시 정부 시절 통과시킨 애국자법을 이용해 CIA와 FBI는 무슬림과 이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2006년 연방정보국 BND가 자국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심지어 정보원으로 고용했음이 발각됐다. 2013년에는 프랑스의 해의 담당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 DGSE가 국내와 국외 통신 정보를 감시해 왔다고 <르몽드>가 폭로했다. 영국도 국내는 MI5, 해외는 MI6로 분리돼 있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MI5가 저명한 좌파 역사가인 에릭 홉스봄을 비롯한 반전 운동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수십년 동안 사찰해 왔음이 2014년에 폭로됐다. 이런 일들은 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감춰지기 일쑤다.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보안경찰이 어떤 형태를 갖추든 내부로 향하는 칼끝을 감출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지금 국정원이 자체 개혁 운운하며 눈치를 보는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때문이고 그런 억압 기구들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하려면 계급 세력 균형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특히 노동계급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계급은 지배자들이 보호하려는 이윤과 체제를 공격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도 노동자들의 구실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 7면에서 이어짐

퇴출시키자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힘과 권력을 사용해 노동계급이 어떤 성도덕을 갖고 행동해야 할지를 통제하고 제한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도덕적

이고 위선적이고 지독한 성차별주의자들이다.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죄인 취급하지만 정작 권력자들의 성상납과 성추문은 모른 체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도 미온적이다. 가해자를 아예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은 판사들이 강간죄를 경시하면서 피해 여성도 잘못된 게 있다고 판결한다.

지배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 자신의 지독한 편견과 함께 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계급적 이해관계와 관련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다음 세대 노동력을 생산하고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일을 떠안고 지배자들은 그만큼 비용을 아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보수적 가족 가치관을 퍼뜨리며 여성차별을 정당화한다.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시키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에, 성차별주의를 포함해 온갖 후진적인 사상을 사회에 퍼뜨려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체제와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려 한다.

사회의 지배층에 만연한 성접대 문화는 그들의 성차별주의와 특권이 결합된 것이다. 이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주로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물론 성차별주의가 단지 권력층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차별주의는 단지 개인들의 편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가족 구조에 뿌리내려 있기에 이를 지탱하는 핵심 세력은 지배계급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지배계급의 권력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김인식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접 고용은 아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려고 만든 자회사의 노동자들 처우가 열악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애초 본사 직고용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유리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물이 절반이나 차 있네”, “아니야, 물이 절반밖에 안 차 있잖아” 하는 식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다.

물론 행동에 나선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협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평가 잣대일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을 비교적 잘 아는 정의당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기조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을 공식 정치권에서 최초 폭로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100퍼센트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지만 본사의 책임 하에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고용 차별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글은 이 문제를 다루는 정의당의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나?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를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이정미 의원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폭로는 정권 교체 분위기와 맞물려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이 주요 정치 문제가 됐다.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쟁점화해서 해결되기까지 과정은 정의당의 모순된 성격을 잘 보여 준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시사점이 있다.

파리바게뜨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분은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일방으로 폐인 교육수당 관련 노무 상담을 받으러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찾아갔다.

당시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지할 것임을 표방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핵심 선거 슬로건으로 걸었다. 그러

자 지하철 9호선, 농협물류, 현대라이프생명 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지지해 정의당 후원을 결정했다.(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은 얼마 전에 파업도 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노동현장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정의당의 문을 두드린 노동자들 중 한 명이었다.

무엇보다, 임종린 지회장이 집권 후보 직전의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이 아니라 정의당(비상구)을 찾았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대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한 200만 명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파리바게뜨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만 봐도 정의당은 노동자 정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의 중재

더 일반적으로 말해, 정의당의 주된 사회적 기반(투표자나 재정 등)이나 그당이 주되게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하는 사회 계급을 보면, 그 당은 노동자 정당이다.(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원 모금 —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었다, 235호를 보시오.)

그런데 정의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애쓴다. 이는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은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도 있는 파리바게뜨 사측의 엄살과 거짓말 — “제빵사 직접 고용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등 — 을 시원하게 폭로했다. 그러면서 직고용이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를 주요하게 제시했다. 자본가가 져야 할 비용 부담이 없다고 안심시키고자 한 것이다.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에는 정의당의 중재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어제 저녁[1월 10일] 제가 급히 (주)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를 만나 성실 교섭을 요구한 것도 타결에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위에서 언급한 페이스북에서)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런 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협력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한국노총, 가맹점주협회, 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당’에 감사 인사를 했다(위에서 언급한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등 우익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정치판”이라고 흥분했다. 시장주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며 강짜를 부리는 우익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데 주류 정당(과 의회) 등의 중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과연 노동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할 수 있을까?

이정미 대표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2017년 9월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즉각적인 요구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즉, 대기업 노동조합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함께 제도 개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주장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도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

물론 복지국가는 필요하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자는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이익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노동자들이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강제할 잠재력도 커질 것이다.**

서구의 경험에서도 보듯, 개혁주의 전략은 현실에서는 노동계급에게서 개혁을 회수하려는 지배계급(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의 시도를 일관되게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 시리자의 사례처럼) 집권하면 그 자신이 같은 공격에 나서기도 한다.

따라서 좌파는 대중 스스로 행동을 통해 투쟁 의지를 발전시키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계급 자력 해방을 향한 장기적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이것이 즉각적인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좌파는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함께(즉,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참을성 있게 이 긴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김종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파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후에도 김종대 의원은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김태영의 말과 달리 비밀 군사협정에 정식 서명한 주체는 당시

외무부 장관 유명환이라는 사실과,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한 당사자가 이명박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꼬리 자르기’를 경계하고 이명박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김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그전까지 침이 튀도록 정부의 외교 무능을 제기하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궁색해져 조용히 꼬리를 내렸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철떡공조’를 자랑하며 중동의 긴장을 끌어 올리는 대표적 국가인데 그들이 벌이는 전쟁에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니 실로

간담이 서늘하다. UAE와 그 인근 해역에 파병된 한국군(아크 부대, 청해부대)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安危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면 합의

우익은 결핍하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고지순한 가치로 내세우지만 이번 폭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명박, 김태영 등이 언론과 국회에 대고 “이면 합의 없다”고 말한 내용을 다시 듣고 있으면 정말이지 눈

하나 깜짝 앓고 거짓말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특히 군사 분야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핵심 부문이자 그만큼 은밀하고 더러운 뒷거래가 많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용이 많기로 악명 높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 속한 김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토대로 폭로하는 것은 몹시 유용하고, 무엇보다 국회 바깥에서 좌파와 진보 진영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견제도 만만찮을 것이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당 김학용이 국방위 의원들의 UAE 방문을 추진하면서 정작 김종대 의원은 배제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의당과 김 의원이 앞으로도 이런 견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급진적 열망에 귀 기울이며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 더욱이 김 의원의 말대로 문재인이 UAE와의 비민주적 군사협정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강추/필독 |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유독 천대받는 집단이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는 혐오 범죄에 유독 많이 시달린다. 트랜스젠더는 대부분 “남자냐, 여자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화장실, 병원, 학교, 은행, 투표소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험겨운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점점 드러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한 활동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 해 전부터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중심이 돼 2016년부터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시에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일부 근본적 페미니스트는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주장을 한다.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해 하리수 씨 등과 논쟁을 벌인 바 있고, 한때 ‘위마드’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크로스트레서는 정신병자”라는 문구를 입력해야만 했다.

또 근본적 페미니즘 성향의 신생 출판사 열다북스는 트랜스젠더 배척 주장으로 악명 높은 실라 제프리스의 일부 논문을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이 프북스도 3월에 트랜스젠더 배척 성향의 위마드를 옹호하는 책을 출간한다고 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트랜스젠더해방전선’의 항의를 받고 있다.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을 엮은 정진희 연구원이 속한 젠더와계급연구회는 최근 이 책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한 트랜스젠더는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받은 경험을 얘기하며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의 출간 소식에 희망을 얻어 참가했다. 책 출간 소식이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 말이 이 책의 출간 의의를 잘 보여 준다.

주 저자인 로라 마일스는 트랜스 여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외 지음, 정진희 엮음, 책갈피
184쪽, 9,000원

성이고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이다. 영국 최초로(어쩌면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였다. 마일스는 자신의 풍부한 활동 경험을 살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한다.

차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의 장점은 무엇보다 차별의 물질적 근원을 분석하고 해방의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1부 “트랜스젠더 차별과 저항”에서 로라 마일스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컨대 아메리카 수렵 채집 집단에서는 오늘날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는 ‘두 영혼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중 받았다.

그러나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남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가족, 세습을 위한 일부일처제와 여성의 지위 하락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성별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 비난 받고 금지됐”다.

자본주의의 지배자들 역시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떠맡는 가족 제도를 공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하라” 2017년 영국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고히하기 위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성별 규범 등도 재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애 혐오나 트랜스젠더 혐오도 재생산된다. 따라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그 뿌리인 자본주의를 공격해야 한다.

저항의 일부

마일스는 트랜스젠더가 역사에서 언제나 저항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등장한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첫째 물결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젠더 때문에 탄압받는 사람들을 광범하게 포괄했다.” 또한 1960년대 말에 등장한 둘째 물결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정체성 정치의 득세와 성소수자 운동의 온건 개혁주의화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 밀려나게 됐다. 마일스는 이 과정을 돌아보며 성소수자 운동의 빛나는 역사뿐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할 역사도 다룬다.

마일스는 정체성 정치, 퀴어 이론, 교차성 개념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다루며 왜 마르크스주의가 차별에

맞선 효과적 전략·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1부에는 2017년 영국 교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주의자와 성소수자 교사, 그 밖의 평등 지향적인 대의원들이 힘을 합쳐 트랜스젠더 교사와 학생들을 분명히 지지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를 다룬 글도 실려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역사를 사회주의자들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2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다룬다.

로라 마일스는 트랜스 여성이 ‘여성의 공간’을 침해해 여성을 위협에 빠뜨린다고거나, 여성으로 사회화하지 않아서 “진짜 여성”이 아니라고거나, 트랜스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거나 하는 식의 주장을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 이런 주장들은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들이 종종 차용하는 논리다.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한서희-하리수 논쟁에 관한 양효영의 글도 포함돼 있다.

분명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차

별 반대 운동 내 소수다. 마일스는 그럼에도 이런 논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이런 주장이 “차별에 맞선 집단적 저항을 건설할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차별받고 착취받는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트랜스젠더 배척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대차게 논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쟁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하는 데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지현

용어설명

트랜스젠더

성별 표현, 성별 역할,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벗어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논바이너리

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크로스트레서

이성의 옷을 입는 사람. 이들의 성별 정체성은 다양하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김종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불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34퍼센트에 달했다(〈한국갤럽〉). 부정 평가자

들은 그 이유로 투기는 못 잡아 집값은 오르게 놔 두고 있으면서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거나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주되게 꼽았다.

2018년 첫 주에 강남 4구의 집값이 한 주에 1억 원씩 뛸 만큼 투기 열기가 식을 줄 몰랐다. 문재인 정부가 반년 만에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무려 여섯 차례나 됐다는 사실이 무색해질 정도다. 물론 강남 집값 상승세가 요 몇 주 새 잠깐 주춤했다고는 한다. 올해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이 제법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인해 일정 부분 강남의 투기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재건축 연한 연장안이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도 한몫한 듯하다. 그러나 규제 도입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 오름세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충격이 가신다면 다시금 상승세가 가팔라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현 상황을 빌미 삼아 ‘정부가 시장을 감히 이기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강남

땅값이 오르는 것은 ‘구조적 공급 부족’이나 ‘강남 8학군’ 때문이라 규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월 29일 치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실제 강남에서 재건축 등으로 없어지는 물량과 준공 물량은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 8학군’ 선호 때문에 강남 지역 주택 매입이 최근 늘고 있다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한다. 요컨대 보수언론들은 투기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을 오도하면서 정부·여당의 미흡한 규제 시도마저 비난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투

기 억제·주거 복지 정책은 턱없이 불충분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해도 그렇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내 풍선효과가 이어지는 듯하다. 이미 투기 세력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남 내에서도 재건축과 무관한 일반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는 가파르다. 또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나 강북 재개발 단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대체재’로 여겨지고 있고, 분당·과천 등 신도시 집

▶ 11면으로 이어짐



추천 도서 |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러 싸워야 한다”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리히 프롬 등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심리학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며 마르크스도 심리학 역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적 심리학자다.

그래서 김태형의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형 서점의 인문학 코너를 도배하다시피 한 심리학 관련 도서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최근 이 분야 으뜸 이슈는 ‘자존감’이다. 김태형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해할 만한 현상이며 ‘자존감 찾기’가 확실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 이 웃과 경쟁을 해야만 생존 가능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존감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잘 헤쳐 나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비판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배제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늘 누군가를 경계해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 심리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자존감과 관계없는 심리적 문제는 거의 없다.

김태형은 자존감이 단순한 현실회피용 심리 조작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무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존감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독을 방어하거나 견뎌 낼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자기방어 무기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목은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유하면서 아편의 ‘치유’ 효과에도 주목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아편은 효과적인 진통제로 사용됐다.)

김태형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한다) 주류 심리학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그 변화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닦이고, 청소년기에는 기본적으로 확립되며, 청년기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한다. 자존감에는 상당한 일관성과 공고성이 있어서 그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자존감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주류 심리학은 흔히 아동기의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환원하곤 한다. 예컨대 오늘날 주류 심리학 강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부모 탓하기”다. 그러나 “병든 사회를 그대로 놔둔 채 부모들만 비판해봤자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아이에게 총 쏘는 훈련을 시키지 말고 자유롭게 놀게 해주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니 다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

자기존중

김태형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과시와 우월, 지배와 통제, 계속적인 확인 등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가짜 자존감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쾌감”을 줄 뿐 진짜 자존감을 확립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점은 주류 심리학도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스크래치’가 난 자존감을 힐링(치유)하려 하는 주류 심리학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반복해서 말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칭찬하라고 조언한다. 효과가 있을까? 물론 없다. 자존감은 객관적인 자기개념과 평가를 토대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김태형 지음, 갈매나무, 240쪽, 14,000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담자나 고등학생인 아들과의 대화 등 풍부한 사례를 쉽게 설명한 뒤 저자가 제시하는 “진짜 자존감을 복원하기 위한 조건”은 이 책의 백미다.

그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가치 기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치열하게 탐구하라”고 조언한다.

또, 단지 자존감의 기초를 복구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다. “어떤 집단에 수용되고 사랑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사람은 사회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을 확립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 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실 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갔는데 … 사람들한테 계속 무시당한다면, 그의 결심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저자는 먼저 건강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병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계속 폭력을 휘둘러 자존감이 손상되고 있는데, 그에게 저항하지 않고 계속 학대당하는 상태에서 마음 수양을 한들 자존감이 회복될 리 없지 않은가.”

“나도 다른 심리학자들처럼 낙관론을 설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거짓 말과는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내 자존감부터 손상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면서도 주류 심리학의 무기력한 대안에 불만을 느끼는 청년들과 ‘힐링’ 유행에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호중

▶ 10면에서 이어짐

값도 들쭉이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인 집값은커녕 강남 투기 역시 제대로 못 잡은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 개발 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환수돼야 한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온건한 NGO인 경실련조차도 지금과 같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구조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규제 강화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예컨대 그 자체로는 충분히 강력한 투기 규제책도 아닌 재건축 연장안에 관해서조차도 그렇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극도로 미온적인 태도다. 보유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공식 추진되는 듯하다. 문제는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분양 받아도 웬만한 집 세 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셈이 된다

는 점이다. 따라서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공정한 처사일뿐더러, 다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집중하는 ‘뽕뽕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 투기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청와대 산하 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다.

소심함의 극치

박주민 의원 등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잖은 듯하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23일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를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가 하루 만에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성 여론이 10명 중 7명으로 압도적이었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소심함의 극치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세력에 대한 과세에 이토록 소극적이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이는 투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뿐 아



이렇게 집이 많은데도 주택난을 겪어야 하는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니라 노동계급의 분배 상황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얼핏 보기에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얻어낸 수익은 토지 자체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토지 보유를 통해 얻은 소득도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가치를 전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나 재건축 등을 통해 축적된 부는 다시 노동계급의 손에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록 빈약할지라도 공공주택의 확충과 주거복지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노동자 연대〉 232호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위한 재원은 바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벌

어들이는 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극도로 미온적이거나 심지어는 투기 세력에 일관되게 맞서고 있지 않는 정부·여당이 이를 알아서 시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친자본가적 정권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 이미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해고해서 없앤다는 뜻이나?” 흑한에도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단을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강철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 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 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를 문재인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라 해고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문재인이 고용 안정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에는 대 전고등법원의 무기계약직 인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8년을 일했는데 여전히 원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으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저히 갈 학교가 없어서 조합원이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물고 뜯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 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해고까지 당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방과 후 수업 행정 업무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전원 해고한 것이다.

피죄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얼마나 피죄죄하고 형편없는지를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극소수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노무현이 만든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처지이다.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일 뿐,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한 투쟁을 통해 이미 82퍼센트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무, 행정, 급식,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온갖 차별이 여전하다.

그조차,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21만여 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수년간 대부분 하루 8시간씩 상시적으로 일했는데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이

상이 배제된 것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학교 비정규직 대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구매에는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척척 쓰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 지원 비용으로 겨우 1226억 원만 책정했다. 그러고는 ‘자율 협약’으로 알아서 하라며 산하 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상시·지속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정해 전환 대상을 최소화했다. 인천교육청은 겨우 0.5퍼센트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교육부 예산은 작년보다 10퍼센트 늘어났다. 시도교육청 예산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작년보다 2조 3260억 원(19.3퍼센트)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오히려 집단 해고로 노동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선 순위에 없는 것이다.

경기 지역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지만, 노조로 조직돼 있고 해고 통보에도 위축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해고 통보 이후에 오히려 조합원이 늘고 있다. 흥송희 방과후코디 경기분과장은 단결해서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6년에 강원교육청이 방과후코디 100명을 집단 해고했지만, 당시 강원도 전역에 흩어져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

워서 해고를 철회시키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투쟁에 나서자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진옥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지부장은 “방과후코디가 해고되면 방과 후 행정 업무가 외부로 위탁될까 봐 방과후강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 1월 30일 청와대 앞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많은 단위 노동자들이 연대하러 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낸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방과후코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